



## 【검토보고서】

2016. 10. 17(월)  
제 274 회 임시회

# 양주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현】

#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자치행정과장)
- 제출일 : 2016년 10월 4일

### 2. 제안이유

- 범죄예방 및 범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관·경 간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및 치안파트너십 강화
- 선진도시로서 시민 생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외적 의지 표명

### 3. 주요내용

- 범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 협의회의 위원장과 구성 정수와 위촉가능한 사람을 정하고, 특정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경우를 위해 해제사유를 명시함.(안 제6조)
-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함.(안 제7조, 제8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을 명시함.(안 제9조, 제10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민간인 참석수당 명시함.(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기 타 : 입법예고(2016. 7.28~8.17), 의견제출 없음

## 5. 검토의견

### 가. 법령검토

○ 2010. 7. 5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행정자치부 질의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10.7.5.) : 별첨 2 참조

####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음.

### 나. 내용검토

○ 안 제3조에서 범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주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내 기관·단체장, 질서확립 및 안전관련 전문가로 한 것은 범질서 확립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 안 제10조는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와 구성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

○ 안 제11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08년 3월 발족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 現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개요   |
|--|
| ◇ 설 치 : '08. 3. 13(대통령 지시말씀, 법질서 확립 추진계획 근거)                       |
| ◇ 목 적 : 민.관.경 상호 협력하에 범시민적 법질서 회복운동 추진을 통한 사회적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 |
| ◇ 구 성 : 13명 ▷ 의장(시장), 부의장(양주시경찰서장)                                 |
| ◇ 회의개최 : 필요시 수시  |
| ◇ 회의시 주요 협의사항  |
| - 방법용 CCTV 추가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
|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실시                                  |
| -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개선 보강                                       |
| - 시위단체와 불법집회시위 근절을 위한 MOU 체결 적극 권장                                 |
| -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광판, 반상회보 등 홍보  |

- 사회적 측면에서는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역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 주도 치안에서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참석 수당 외 예산 지원 규정이 없어 시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지역치안협의회 예산 지원 현황 : 없음

#### 【전국 조례 제정 현황】

- ▶ 광역시.도 : 12개
    -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울산,대구,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경남
  - ▶ 기초자치단체 : 159개
    - 구리,광명,가평,안산,부천,여주,광주,안성 등
- ※ 제정중 : 청주시, 보은군, 대전서구

#### 별첨 1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별첨 2

####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안건번호 10-0154 회신일자 2010-07-05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경찰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2조에서 치안행정협의회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제1호), 민방위 및 재해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질서확립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제3호), 지역주민과 경찰간의 협조 및 요망사항(제4호) 및 기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 관하여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법」 제16조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에 따른 치안행정협의회와 별도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경찰법」 제16조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안의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면,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추52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경찰법」 제16조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시·군·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치안행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고 하여 치안행정협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지역치안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협의체의 설치가 반드시 「경찰법」 등 법령에 따라야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경찰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다음글**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검색목록**

 **전체 목록**

**별첨 3****경찰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공문**

인쇄 : 여덕수 / 자치행정과 (2016-08-12 16:48:22)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양 주 경 찰 서**

수신 양주시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제정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경찰서장 일일회의 時(16. 2. 24)

**2. 위외관련,** 양주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합니다.

**3. 현 황**

-전국 추진현황(16. 2. 24 기준)

·전국 158市, 경기도 7市 1郡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구분   | 구리시     | 광명시      | 가평군      | 안산시     | 평택시    | 부천시     | 안성시     | 광주시      |
|------|---------|----------|----------|---------|--------|---------|---------|----------|
| 제정일자 | 09.9.28 | 10.11.25 | 12.12.31 | 14.2.11 | 15.1.1 | 15.1.12 | 15.9.30 | 15.12.24 |

※ 現, 경기북부지역 11개署 조례제정 市 전무. 끝.

양 주 경 찰 서



경장 박현호 경무계장 이규홍 경무과장 전결 2016. 3. 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경무과-1649 (2016. 3. 14.) 접수 총무과-6719 (2016. 3. 15.)

우 11435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99 (회정동, 양주경찰서) / <http://yangju.police.go.kr>

전화번호 031-869-9321 팩스번호 031-869-9260 / nicepolice23@hanmail.net / 대국민 공개

청렴한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문서관리카드 총무과-6719 1/1